

시평

# 콘텐츠업계의 당면과제와 업계의 의지

## 산업 발전 위한 기반 만들기에 총력 기울여야

글 / 김근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장

갑신년 새해가 시작은 됐지만 해묵은 업계의 당면과제들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새로운 각오로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설렘 속에 맞이했던 지난 2003년은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기업의 자금난 및 실업난 등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적 침체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다. 특히 이러한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산업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었던 디지털콘텐츠산업 또한 구조조정 및 정리하고 등 남모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으며 위기를 기회 삼아 이 어려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갑신년 한해를 한국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연합회는 그간의 오랜 노력에 의해 정부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선도하며 콘텐츠 검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디지털콘텐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비전을 보다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올 한해도 연합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통해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 및 콘텐츠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무선인터넷콘텐츠 검증기관으로서 콘텐츠업계의 세계적인 자율규제 모델을 정립하고,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현 전화정보서비스의 자율규제와 더불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전문 검증기관으로 본 연합회가 국내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투명한 콘텐츠의 유통, 보다 실질적인 사업환경 개선, 세계적 콘텐츠 중심지로서의 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자들의 열망을 채워줄 콘텐츠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둘째** 업계 현안인 음악저작권 문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참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권리자들과의 관계해소, 이동통신사와의 수익분배 문제 및 저작물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 마련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셋째**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화정보서비스 백서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보고서 등을 발간해 업계에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디지털콘텐츠해외마케팅포럼 및 수출용 콘텐츠 테스트베드(TestBed) 운영사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 발굴·전파, 업계 의견수렴 및 정부정책건의 등 업계의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다섯째** 업계만의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들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SMS Opt-In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을 위해 정부가 있고, 산업을 위해 제도가 있다”는 확신으로 산업현실에 동떨어진 제도가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 그리고 유선통신사와의 윈윈(Win-Win) 정책을 제시하고 업계의 자율정화 및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해를 만들고자 한다.

**여섯째**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콘텐츠 후불결제에 따른 미수금 증가와 그에 따른 부가세 선납 및 환급으로 문제, 부풀려진 소득세 문제, 카드사원가와 대비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회수대행수수료 문제 등 업계가 수년간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접근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업체마다 후불제에 따른 회수불능 미수금이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 정도가 쌓여 있다. 이에 따른 발생주의 세법원칙에 따라 부가세를 선납하고, 소득세도 선납하고 끝내는 환급을 포기하도록 돼 있는 현제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없어도 세금을 선납하라’는 현제도에 대해 정통부와 재경부, 그리고 세무당국의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3% 내외에 선납이자 부담료, 미수금책임 부담료, 각 참여자들의 이윤보장 등을 해결하는 반면, 기간통신사들은 10%라는 회수대행수수료도 후불제 처리를 하고 미수금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동의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올해는 매우 공격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

**일곱째** 우리 콘텐츠업계는 모두 하나가 돼 ‘자율규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해외 업계들이 주목하는 우리의 콘텐츠시장에 있어서 자율규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율규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타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해 국민경제의 밥그릇을 키워나가는 데 우리의 혼신의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 또한 업계 및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하기 위한 많은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여덟째** 공공기관부터 디지털콘텐츠 구매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이다. 과거 공공기관들 가운데는 하드웨어를 살 예산만 편성했던 시대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네트워크시대이다. 이 네트워크를 채워 줄 콘텐츠를 정부 및 공공기관들부터 나서서 유료로 사주고 봐주고 들어주고 소비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기계만 사거나 시스템유지보수비용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워 줄 콘텐츠도 반드시 사서 쓰는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차세대 콘텐츠채널확보사업(지상파DMB 사업권 획득) 및 무선망과 관련해 CP 및 소비자, 그리고 시장경제의 입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지상파DMB 사업은 공중파의 재탕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엔진으로서의 산업, 즉 콘텐츠 비즈니스인 것이다. 우리 콘텐츠업계가 반드시 사업권 하나는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또한 무선망 개방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공급자들끼리만 구도를 만드는 느낌이 있었다. WIPI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콘텐츠사업자들의 입장이나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특히 시장경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마켓 지향적인 사고와는 다소 동떨어진 여러 요소들을 제거해 무선콘텐츠의 일대성장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콘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영똥한 중간마진 없이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무쪼록 인터넷 인프라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했다면 이제는 제도와 참여자들의 마인드도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 됐으면 한다. 